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공영주의적 공존의 모색

김항제(선문대)

1. 들어가는 말
2. 공생공영공의주의
3. 다시 말하는 공영주의
4.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공영주의적 공존의 모색
5. 끝내며

1. 들어가는 말

‘공생공영공의주의(共生共榮共義主義)’는 ‘통일원리’¹⁾가 비전으로 하고 있는 이상사회와 그 실천을 위한 사상이며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의미의 지상천국이라고 일컫는 완전사회에 대한 이념이기도 하다. ‘통일원리’에 따르면 공생공영공의주의 사회는 “국가의 재산이 어느 특수한 개인이나 계급에 독점을 당하는 제국주의적인 경제체제를 타파하고 인민들이 그것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를 거쳐서 하늘 편에서는 공생공영공의주의를 지향하고, 사탄 편에서는 그것을 앞질러 먼저 공산주의를 지향하고”²⁾ 그 공산주의가 사멸될 때 등장되고 실현된다.

이러한 역사적 결정론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이상의 세계를 동경하고 찾아가는 인간의 본심은 하나님의 창조목적을 완성한 이상세계를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 마침내 공생공영공의주의를 부르짖고 실현시킬 것이다. 이렇듯이 통일원리는 역사발전에 동의하는 통일사관에 입각하여 공생공영공의주의 사회의 도래를 낙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낙관주의에만 빠질 수 없는 것이 이상사회의 실현에 대한 공생공영공의주의 사상이다. 왜냐하면 공생공영공의주의는 신인협동에 의한 성취 곧 인간의 적극적인 책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생공영공의주의는 이상주의적 전망에 의해 미래를 가름하지만 현실주의적인 실현을 간과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생공영공의주의는 오늘의 정치사회에 관심하고 미래를 향한 현실개혁의 급진성을 추구하게 된다. 이를 굳이 이데올로기의 유형으로 표현한다면 급진적 현실주의(radical realism)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오늘날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치유하고자 하는 이념적 모색을 공생공영공의주의는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2. 공생공영공의주의

먼저 공생공영공의주의의 이념을 파악하기 위해 통일원리가 주장하는 인간과 사회에 관해 어떤 전망을 하는지를 살피고 그에 따라 공생공영공의주의의 이념을 성찰하기로 한다. 이 때

공생공영공의주의가 공생주의와 공영주의 그리고 공의주의의 중중적 이념인 점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1) 인간과 사회

통일원리의 인간관은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의 대상으로서 인간을 말한다. 인간 이외의 피조물과는 달리 창조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의 직접적 대상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하였고 동시에 자율적 책임성을 부여했다.

따라서 인간은 선과 악의 욕망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책임적 존재다. 인간이 타락하여 죄악 중에 있다고는 하나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스스로 선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책임과 능력을 갖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심정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본심의 흔적이 인간의 나태를 뛰어넘을 만큼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선을 지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끊임없이 애쓰고 있을 때 보다 큰 가치의 행복을 느낀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위타(爲他)의 존재다.

이와 같은 인간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바탕으로 참가정을 꾸밈으로써 사회의 기초단위를 구성한다. 그러한 참가정은 가족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넘어선 참사랑의 기초공동체다. 나아가 참가정의 집합체인 사회는 참사랑을 바탕으로 한 공생하고 공영하는 공의의 사회다.

그렇다고 해서 참가정공동체가 자동적으로 공생공영공의의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에게 자율적 책임이 있듯이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회의 모든 가정이 참가정이 되게 하는 것은 연체로서의 책임이다. 사회 공동선의 가치를 우선시하나 참가정의 가치도 무시하지 않는 수수법적 관계, 곧 가치와 가치의 독립성과 관계성이 발전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연체로서의 책임을 통해 사회는 유지된다. 따라서 참가정을 이룰 수 있는 공의의 사회적 환경도 매우 중요시된다.

2) 공생공영공의주의

이러한 인간관을 갖고 있는 통일사상의 공생공영공의주의 중 공생주의는 경제사상이다.⁴⁾ 다시 말하면 “공생주의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터로 한 공동소유”⁵⁾의 사상이다. 여기서 공동소유란 물질적 소유만은 아니다. 소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본주의 경제는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고,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는 사회적 소유를 전제하는 것이다. 공생주의의 소유관은 자본주의나 공산주의가 모두 물질적 소유만을 말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정신적 소유도 염두에 두고 출발한다. 따라서 공생주의에 있어 소유란 “첫째, 하나님과 나와의 공동소유”⁶⁾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생주의의 소유관은 ‘공적 사유’(共的 私有)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생주의 하에서의 공동소유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터로 한 하나님과 나, 전체와 나, 이웃과 나라고 하는 공동소유의 개념, 곧 공적 사유의 개념으로 정식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적 사유의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통일사상에 따르면 “그것은 자기의 분수에 맞는 정도, 곧 적정소유”⁷⁾다. 또한 그와 같은 적정소유는 스스로의 양심에 맡기면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양심이란 본심, 곧 본연의 인간이 갖고 있는 양심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 물적

욕구보다 심리적 욕구가 더 큰 가치를 갖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양심에 따른 적정소유는 가능하다.

또한 공적 사유에 의한 공생주의는 경제활동을 단지 물질적인 재화의 유통과정으로만 여기지 않는다. 공생주의 하에서의 경제활동은 심정과 사랑, 감사와 조화가 함께 흐르는 물심일여(物心一如)의 통일적 과정으로 규정된다. “재화 그 자체도 정성과 사랑이 함께 깃들어 있는 물심일여적 개체이며, 유통과정 그 자체도 경제활동의 주체들이 쏟는 정성과 사랑이 함께 흐르는 물심일여적 과정”⁸⁾이기 때문이다.

공생공영공의주의 중 “공영주의란 이상사회의 정치적 측면을 말하는 미래사회의 정치”⁹⁾ 사상이다. 통일사상에서는 “특히 자본주의사회의 정치이념인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¹⁰⁾으로서 공영주의를 말하고 있다. 자본주의를 토대로 한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제시된 공영주의는 한마디로 공동정치에 관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정치란 공동참여의 정치적 제도와 운용을 말한다. 공동참여란 참된 의미의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되는 대의원선출을 통한 참여를 의미한다. 이 때 강조되는 점은 먼저 대의원 선출에 있어 “하나님의 참사랑을 터로 하고 하나님을 대신한 메시아를 인류의 참부모로 모시고 사는 가정에 있어서의 형제”¹¹⁾로서 입후보한 대의원에 대해 선출하는 것이다.

또한 그 입후보자로 출마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이웃에 의해 천거되는 사람들이며, 엄숙한 기도와 의식이 수반되는 추첨방식으로 선거되며 그 결과를 신의(神意)로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참여를 말한다. 따라서 공영주의에 있어서의 공동정치는 “인류의 참부모를 중심하고 형제를 위한, 형제에 의한, 형제의 정치”¹²⁾라고 비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주의는 민주주의 정치라기보다는 하나님주의를 중심한 공동참여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공영주의가 지향하는 궁극적 정체(政體)는 메시아왕국이다. 인류의 참부모되신 메시아를 중심으로 참사랑의 대가족사회를 이루고 공동참여에 의한 공동정치를 하는 메시아왕국을 말한다. 이 때 메시아왕국은 지역적인 국가 개념이나 전통적 군왕 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따라서 메시아의 강림은 지역적 국가의 하나인 선민국가에서 이루어지나, 메시아왕국의 실현은 세계통일이 이루어진 뒤에나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통일원리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공영주의 정치체제에서 권력의 분담은 삼권분립의 이념이 수용된다. 이는 몽테스키외의 주장처럼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권력 분립이 아니라 삼권의 업무를 조화시키기 위한 분담의 의미가 강하다. “공영주의에 있어서 권력은 참사랑의 권위를 말하는 것으로써, 대상으로 하여금 주체의 참사랑에 마음으로부터 고마움을 느끼고 그 주체의 의사에 자진해서 복종하게 하는 심정적인 힘을 말한다.”¹³⁾

공생공영공의주의 중 공의주의란 공동윤리의 사상이다. 따라서 공의주의란 “모든 사람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도덕, 윤리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도의사회(道義社會), 곧 공동윤리사회를 이루해야 한다는 사상”¹⁴⁾이다. 또한 공의주의는 도래하는 이상사회의 윤리, 곧 만인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동으로 동일한 윤리관을 지니고 사는 공동윤리사회의 가치다.

따라서 공의주의는 종교조차 소멸된 미래사회의 비전이다. 공의주의 사회는 참부모되신 메시아와 더불어 현실 속에서 참사랑의 생활 곧 천국생활을 영위하는 사회다. 그러한 사회는 만인이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신앙 위주의 종교 교리는 실천

위주의 생활윤리로 변화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상사회를 가리켜 공동윤리의 사회, 곧 공의주의사회라고 한다.

이러한 공의주의사회의 특징은 ”첫째,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삼대주체사상에 의한 삼대주체의 참사랑운동에 의해 뒷받침된다.”¹⁵⁾ 이 때 삼대주체사상이란 삼대중심, 곧 가정의 중심인 부모, 학교의 중심인 스승, 그리고 주관의 중심인 관리자의 삼대주체가 하나님의 참사랑을 각자의 대상인 자녀, 학생, 종업원에 대해 끊임없이 또 무한히 베풀어 줌으로써 상호간의 사랑을 증진시켜 전사회가 사랑의 사회, 윤리의 세계가 되는 것이다.

둘째, 공의주의의 공동윤리는 참가정윤리의 확대형이다. 참사랑을 중심한 참부모와 참자녀가 일체를 이루어 형성한 가정적 기대는 공동윤리사회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가정윤리가 확대되면 사회전체가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넘치게 된다. 이것이 공의주의의 공동윤리다.

이와 같은 공생주의, 공영주의 그리고 공의주의는 개별적 개념과 내용을 갖고 있지만 분리된 사상은 결코 아니다. 경제, 정치, 윤리를 포괄하여 공생공영공의주의로 일체를 이루는 이상사회에 대한 이념이기 때문이다. 공생공영공의주의는 그 전체로 통일원리와 사상의 이상사회론을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생과 공영 그리고 공의의 관계를 살펴보는 일은 전체로서의 개념을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공생공영공의주의에서 토대를 이루는 사상은 공의주이다. 공의는 공생과 공영의 토대요 기본이기 때문이다. 이 때 공의는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정의(正義)의 개념을 넘어서고 있다. 롤스(J. Rawls)에 따르면 정의는 공평을 그 속성으로 하고 있다. 공평성은 자연상태와 같이 원초적인 사회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이와 같은 정의는 각각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는 자유를 평등하게 나누어 가지는 것이 그 원리의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 불평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의주의의 공동윤리는 정의를 참사랑이 떠받들고 있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공평한 분배를 서로 위하고자 하는 참사랑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공의주의는 미래사회, 곧 이상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체제를 운영시키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 하여튼 공생주의, 공영주의, 공의주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합성일체를 이룬 가운데 하나님이 이상했던 창조이상의 세계는 실현되는 것이다.

3. 다시 말하는 공영주의

이미 언급한 것처럼 공영주의는 통일원리와 사상이 말하는 이상사회의 정치적 이념을 말한다. 통일사상은 그와 같은 정치적 이념으로서 공영주의를 자본주의를 토대로 한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자본주의를 토대로 한 민주주의의 대안으로서의 공영주의는 민주주의를 인민의 자유와 평등의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 이상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를 자본주의를 그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¹⁷⁾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는 구조적 모순에 의해서 부의 격차와 편재를 초래하여 대다수의 인민들에게 경제적인 불평등과 부자유를 안겨 주었다. 경제적인 불평등과 부자유는 바로 정치적 불평등과 부자유로 연결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는 공영주의 또한 명백히 경제가 정치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주권은 이름만 인민의 주권일 뿐 실질적으로는 대의정치를 표방한 정당인에 의한, 정당인의 주권이 되었다. 따라서 정당이란 정권획득을 위한 정치적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그 속성상 참다운 대의정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없는 한계를 임태하고 있음이 증명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공영주의는 민주주의의 대의정치에 대한 대안에 주목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공영주의의 대안은 공동정치의 이상을 현실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논리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대의정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본질적인 이상의 실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¹⁸⁾

공영주의가 말하는 공동정치를 좀 더 자세히 살피면 “첫째로, 대의원선거에 있어서의 입후보자의 상호관계는 라이벌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사랑을 터로 하고 하나님을 대신한 메시아를 인류의 참부모로 모시고 사는 가족적 형제자매의 관계”이고, “둘째로, 대의원선거에의 입후보자들은 자의에 의한 출마가 아니라 여러 이웃(형제)들(타의)의 천거에 의한 출마”인데 “참사랑을 중심한 형제자매의 관계에 있는 유능한 인재들은 서로 양보하려 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선거는 막대한 비용과 부작용이 동반되는 투표방식이 아니라, 초단계(初段階)의 간략한 투표방식의 터 위에 행해지는 엄숙한 기도와 의식이 수반되는 추첨(抽籤)방식에 의해서 치루어”지고 “이 때 당첨된 후보자나 당첨되지 않은 후보자나 모두 그 당락이 신의(神意)에 의한 것으로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전체 국민들도 그 신의에 감사하면서 그 결과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이는 공영주의야말로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한 공동참가의 정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며 민주주의가 이루려다가 오늘날까지도 이루지 못하고 남겨져 있는 진정한 자유, 평등, 인권 존중, 박애 등은 이 천부주의(天父主義) 중심의 형제주의정치(兄弟主義政治)에서 비로소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형제주의 ¹⁹⁾적 민주주의정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공영주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의하고 있는 현대 정치학과 그 지평을 상당부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영주의가 형제주의적 민주주의정치 과정을 이상적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며, 현대 정치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또한 민주주의의 정치적 이상을 그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지평은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근대 민주주의의 대의정치가 갖는 한계를 말하고 나아가 새로운 민주주의의 패러다임은 물론 그에 대한 공영주의적 이해와 비판을 모색해보자 한다. 근대 민주주의가 이룩한 제도적 혁신은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의제 민주주의는 영토국가의 인민 지배를 근대국가의 환경에서 실현하기 위한 제도였다. 인민의 집단적 의사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정치는 선거였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수단을 통해 대표를 선출함으로써 시민들의 집단적 의사를 확인하고, 대표들에게 집단적 의사의 실현을 위임하여 국민의 지배를 실현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민주적 참여(participation)에 의한 정부의 구성으로써 자유로운 인민의 선택에 의해 정부가 구성되고, 정부는 인민의 동의에 근거해서 지배의 정통성을 획득하여야 한다. 다음 민주적 책임성(accountability)의 확보로써 선출된 대표가 인민의 완전한 대리인으로 정치하도록 강제되어야 하며 인민의 공동선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 대표는 적절한 방법 ²⁰⁾에 의해 퇴출될 수

있어야 한다.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인민의 지지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가 인민의 완전한 대리인으로 행동하지 않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²¹⁾

그러나 현대에 와서 근대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와 제도적 펴로에 관한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근대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여전히 “대표의 실패”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가 인민의 완전한 대리인으로 행동하지 않고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상존하나, 선거만으로 주권자인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대표들을 처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주권자인 인민과 그 대리인 간에 거리는 좁혀지지 않고 있어 주권자로서의 인민의 역할은 대표의 선출에서 끝날 뿐 정책의 선택은 대표에게 일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치적 분업이 인민의 정치적 소외감과 냉소주의에 빠지게 한다. 그 결과 인민과 대표들 간의 거리는 더욱 멀어지고, 정치전문가들이 주권자인 인민을 대체하는 기술관료적 민주주의가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대의제 민주주의는 공공선의 개념이 부족하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치적 과정은 모든 인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공동선을 발견하려는 과정이 아니라, 갈등하는 이익들이 사회적 선호 곧 집단의사로 선택되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으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대의제 민주주의는 갈등하는 사익 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시장민주주의²²⁾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대의제 민주주의가 노정하고 있는 결함을 시정하고 개선하며 나아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라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민주주의로 심의 민주주의, 결사체 민주주의, 전자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현대정치학에서 논의되고 있다.

먼저 심의 민주주의는 시민²³⁾이 직접 심의에 참여하는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민주주의다. 심의 민주주의 하에서는 시민과 대표가 모두 심의에 참가하고 대표와 시민 간의 거리는 좁혀지고 경계는 흐려진다. 이제까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어왔던 많은 영역들이 시민의 직접 참여와 심의를 통해서 운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심의 민주주의의 의사결정과정은 심의에 의존한다. 시민들과 대표들이 이성적인 성찰과 판단에 근거하여 공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토의, 토론, 심의하는 것이다. 심의 민주주의 하에서 “공적 토론의 영역”(public sphere)은 대화, 담론, 토론, 심의를 통하여 시민들이 자신의 선호를 형성하고 세련시키며, 자신의 잘못된 선호를 교정할 기회를 제공받는다. 따라서 공공영역은 다양한 시각과 이익들이 상호이해와 공동의 행동이 수렴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의 민주주의의 유용성은 먼저 오늘날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능력(problem solving)이 높다는 점이다.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대의기구의 결정이 자동적으로 정당화된다면 그 결과는 순순한 “홍정 민주주의(bargaining democracy)”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목적은 집단적인 문제,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심의 민주주의는 이타주의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인 행동을 장려한다. 심의과정에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사익에 근거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익이나 공동이익의 관점에서 토론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선을 지향하는 정치가 활발하게 된다.

이러한 심의 민주주의의 핵심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간접참여 과정을 보완하여 직접참여의 폭을 넓히자는 것이라면 이는 공영주의의 공동참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공영주의는 이성적이며 공공성에 의한 심의 민주주의보다 배려와 관용을 터로 한 공동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결사체 민주주의는 균형 잡힌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 결사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결사체 민주주의 하에서 과부하 된 국가가 감당하기 힘드나 시장에 맡길 수도 없는 영역에서 시민 결사체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를 대신하여 대안적 정부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1 세기에는 ‘비이윤추구적인 경제’ 곧 사회적 경제의 비중이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경제에지지 않을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시민사회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결사체 민주주의의 시장의 자기 파괴성, 국가의 경직성과 억압성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안적 민주주의다.”²⁴⁾

따라서 결사체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능력을 높여주고 있다. 그중 하나는 시민 결사체들은 민주화 이후 투표로 선출된 대표들의 권력을 제한하고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대표가 시민들의 복지를 극대화하도록 강제하는 민주적 통제를 이를 수 있다. 시민 결사체들은 정치인과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대표와 정부 부서의 수행 실적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선거에서 낙천, 낙선운동을 통해 대표의 선출과정에서의 시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또 하나 시민 결사체는 과부하된 정부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대안적 정부의 기능을 수행한다. 시민 결사체는 시장과 공적 위계조직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통치 (social governance)의 주체다. 또한 시민 결사체는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킴으로써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주의의 능력을 높여주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상호이익을 주고받는 협동과 조정을 촉진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규범, 네트워크, 신뢰의 조직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민 결사체는 수직적 수혜주의를 타파하여 권위주의의 관행과 거래가 잔존하고 있는 권위주의를 해체하고 민주주의로 편입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민사회는 바로 이러한 비시민적 연고주의 네트워크를 해체시키고 시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소외되고 배제된 인권, 여성의 권리, 소수파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결사체 민주주의야 말로 공동참여에 의해 신율(theonomy)²⁵⁾적 책임에 따라 공동선을 성취하고자 하는 공영주의에서 참다운 가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결사체가 다시 시장의 주체가 되는 순환주의적 모순을 근본으로 해결하는 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전자 민주주의란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화된 정보를 활용하여 대의제 민주주의를 개선하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대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시도를 말한다. 전자 민주주의의 기본적 수단은 인터넷이라는 쌍방향 소통과 다(多)대(對)다(多) 통신이다.

이러한 디지털 혁명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디지털 혁명은 방대한 영토와 대규모의 인구로 구성된 영토국가가 민주주의의 실현에 가하고 있었던 제약을 해제시켜주고 있다. 이제 일반 시민들도 디지털화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직접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정부와 정치인들과 직접 대화를 하며 전자매체가 제공하는 토론장을 통해서 공적 토론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 민주주의의 두드러진 유용성은 '정보를 가진 시민'(informed citizen)에 의해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에 접근하게 하고 있다. 먼저 정치, 정치인에 관한 정보를 전자 정보 광장에 공개함으로써 정치의 투명화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할 수 있다. 전자 민주주의로 정보의 접근, 공개, 유통에서 획기적 개선을 이룩함으로써 정치의 투명성을 높여주고 있다. 나아가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전자 민주주의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정치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줌으로써 깨끗한 정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다음 고객만족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정치인들은 인터넷 토론판장에서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유권자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유권자의 요구를 재빨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 요구를 정치과정에 즉각 반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빠르게 응답하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을 통해 유권자는 항시로 대표와 직접 접촉하고 통화하여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의 유권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책임 민주주의(accountable democracy)'로의 일대 진전을 이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 민주주의는 공영주의도 적극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자 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를 이루게 하는 통과기재라면 공영주의의 공동참여 정치에도 활용되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전자 민주주의의 자율적 책임과 정보 소통상의 에티켓은 전자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전제이기 때문에 이 또한 공영주의적 배려와 관용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전자 민주주의의 직접참여의 길은 공영주의의 공동참여일 때 완전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심의 민주주의, 결사체 민주주의 그리고 전자 민주주의가 말하는 대안적 요소를 총체적으로 말한다면 대의적 참여가 민주적 참여는 어느 정도 성취시킬 수 있었으나 민주적 책임성은 이를 수 없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의제로 선출된 대표가 인민의 완전한 대리인으로 행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러한 대표를 강제할 수 없는 제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민주적 참여와 책임성의 진정성에 대해 공영주의는 형제민주주의정치를 제안하고 있다. 공영주의가 말하고 있는 형제민주주의정치는 심의 민주주의가 갖는 대안성의 핵심 곧 이타주의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인 태도를 자율적으로 정향함으로써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 민주주의는 그러한 정치적 과정을 심의에 맡김으로써 여전히 당파성을 벗을 수 없음에 비해 공영주의의 형제민주주의정치는 그와 같은 당파성마저 관용성을 바탕으로 넘어설 수 있다고 말한다. 결사체 민주주의 또한 선출된 대표들의 권력을 제한하고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통제를 이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함으로써 시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성이 있음을 틀림없다.

다만 감시와 견제의 기능강화만으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다. 공영주의의 형제주의적 민주주의정치는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완벽하게 수행되려면 형제주의적 관용이 뒷받침되어 자율적 감시와 호혜적 견제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이상을 본질적으로 이를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뿐만 아니라 권위주의를 해체하고 소외되고 배제된 인권, 여성의 권리, 소수파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전자민주주의가 정치의 투명성을 높여주고 나아가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으로써 이상적 민주주의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대표의 유권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책임 민주주의'로의 일대 진전을 이룩할 수 있다. 이 또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에는 틀림없으나 공의주의의 형제주의적 정치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율적

책임성 [26](#)을 전자적 환경에만 의존하기에는 너무 많은 결함이 있다. 따라서 전자 민주주의는 공영주의의 형제주의적 민주주의정치처럼 본질적 변화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4.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공영주의적 공존의 모색

그렇다면 공영주의의 형제주의정치가 오늘날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 곧 경제적 양극화 현상에서 비롯한 정치사회적 양극화에서 어떻게 공존을 모색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 한국사회가 처한 정치사회적 구조의 모순이 경제적 양극화에서 비롯되었음에 틀림없으나 경제적 양극화의 해소만으로 정치사회 구조의 모순이 함께 해소된다고 볼 수 없다.

외환위기 이후 표면화된 한국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 되어 왔고 지속적인 분배구조의 악화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에 있는 빈곤층 이른바 신빈곤(new the poor) 또는 일하는 빈곤(working the poor)이 그 위험수위를 넘어 섰다. 이로 인해 급격한 노동의 양극화를 가져왔고 여성들의 상당수를 빈곤층으로 전락시키는 이른바 ‘빈곤의 여성화’를 초래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한국사회의 주택, 교육, 의료 그리고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등 복지영역을 과도하게 시장과 가족에 의존하는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경제성장률의 둔화, 소득분배 악화로 인한 계급과 계층의 양극화를 불렀고, 상대적 빈곤의 심화, 출산력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등의 변화된 상황에 직면해 총체적인 사회발전의 위기와 잠재력 붕괴로 나타나고 있다.

더 심각한 현실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정치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사회의 양극화는 단순한 경제현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과 삶의 조건에 대한 실제적 위협이며 한국사회는 경제적 불평등, 빈곤의 확산, 사회적 배제의 구조화로 인해 사회발전의 잠재력과 공동체성을 상실한 사회로 후퇴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정치사회적 구조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한다면 이렇다. [27](#) 먼저 의료와 교육의 양극화문제다. 의료와 교육은 현재와 미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권적인 사회서비스로 공적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과 사교육 위주의 교육 시스템은 기본권 보장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평등과 사회적 차별이 대물림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사회적 양극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빈곤의 유무를 넘어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로 인식의 범위를 확장하고 그에 따라 사회정책을 재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불합리한 선정, 급여 기준을 개선함과 동시에 최저생계비의 결정방식을 일반 가구 대비 상대적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차상위 빈곤계층에게 의료와 교육 등 기본적 급여 수급권을 인정하여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한 취약계층의 최저 소득보장과 기본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간병, 요양, 보육 등 돌봄 노동의 사회화 필요성이 높아져 왔고 이러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사회화가 검토되고 있으나 민간 용역업체 등이 이러한 일자리를 독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공공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시설이나 보육비용 지원 측면에서 민간의존도가 크며, 과도한 민간의존은 보호자의 비용부담을 증가시켜 적절한 보육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다. 민간시설 의존으로 인하여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어려우며 무엇보다도 공급자 주도의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가격 및 서비스 통제가 불가능해 질 것이다.

적정한 주거공간의 확보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영역이다. 그러나 주거 지원은 다른 사회서비스에 비해 보장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보장 수준과 범위가 크게 제한되어 왔다. 공공임대주택 등 사회주택 재고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 주거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층에게 주거비 지출은 가장 큰 부담이 되어 왔다. 따라서 지속적인 공공 임대주택의 건설을 통하여 주거취약계층과 서민층을 위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정책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은 한마디로 경제사회적 구조의 모순을 바탕으로 그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치사회적 구조의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현 정부가 주장하는 ‘양극화 극복’과 ‘동반성장’이 실제로는 ‘기업투자 활성화와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부진한 구조개혁, 기업 규제완화, 무분별한 개발추진 등 과거 성장주의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교정하는 조세와 사회복지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개혁, 복지재정의 확대는 매우 더디고 취약하다.

현 정부는 오히려 의료, 교육, 보육 영역의 산업화, 시장화를 시도하는 등 복지와 공공서비스의 국가적 책임에 역행하는 신자유주의적 사회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은 더욱 취약해 기본적인 과세형평 및 조세정의도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자산소득에 대한 정당한 과세의 미비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격차를 구조화시키고, 서민에게 더 큰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양극화 해소는 물론 공종을 지향하는 사회통합은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었다.

공존의 사회통합은 다수 국민의 삶의 조건을 보다 더욱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는 경제적 불평등, 빈곤의 확산, 사회적 배제 상황의 극복을 위해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한국사회의 정치사회적 모순을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나아가 정당정치가 지배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와 괴로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제주의정치를 펼치고자 하는 공영주의는 배려와 돌봄을 위해 고통에 참여하고 희생을 지체하지 않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한 공동참가의 정치이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고 공존을 모색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이루려다가 오늘날까지도 이루지 못하고 남겨져 있는 진정한 자유, 평등, 인권 존중, 박애 등을 성취하고자 한다. 이러한 공영주의는 이타주의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이기 때문에 공공선을 형제주의 입장에서 이루고자 하며 그와 같은 정치사회적 통치를 그 이데올로기로 하고 있다. 이는 추첨으로 선출된 대표의 유권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책임 민주주의의 구현하고자 하는 공영주의적 공존의 모색을 위한 토대다.

예를 들면 신빈곤으로 야기되는 삶의 양극화 곧 의료, 교육, 주거의 양극화는 사회적 불평등으로 구조화되었으나 그 해소를 위해서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넘어서 공영주의적 민주주의 곧 양극화의 평등을 조정하는 길을 배려와 돌봄을 위해 그리고 고통에 참여하고 희생을 지체하지 않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한 공동참가의 정치 곧 형제주의적 정치를 실천하는 길만이 궁극적인 공존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6. 끝내며

현재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고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근대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와 피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이미 언급한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대체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공영주의가 필요하고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공영주의는 다음과 같은 전제에 관심해야 한다. 먼저 공영주의적 공존의 모색을 위해 공영주의적 공존의 개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공영주의는 다분히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어서 현실적인 이데올로기가 될 수 없다는 반론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사상이든지 이데올로기 곧 통치이념이 되지 못한 바에야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공영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설명하는 개념의 모호성은 공영주의가 극복해야 할 이데올로기화 과정이다.

나아가 공영주의적 공존의 모색을 위해 정치적 현실주의에 입각한 실천력을 획득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치적 이상은 정치적 실천이 없고서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공영주의 또한 정치적 실천력을 드러내는데 주저하면 안 된다. 이 경우 요청되는 것은 정치적 현실주의 곧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비판과 분석에 공영주의의 이념적 발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
- 1) ‘통일원리’는 문선명 선생이 규명하고 선포한 새로운 진리로서의 ‘원리와 사상’을 통칭하며 ‘원리강론’에 집약되어 있다.
 - 2).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서울: 성화출판사, 1995), pp.473–474.
 - 3) 급진적 현실주의(radical realism)의 급진적(radical)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근본적’이라면 이는 이상적이라는 뜻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생공영공의주의를 급진적 현실주의로 표현해보았다.
 - 4) 공생공영공의주의에서 공생주의를 경제사상으로, 공영주의를 정치사상으로 그리고 공의주의를 윤리사상으로 보는 견해는 통일사상요강을 쓴 이상현의 견해이어서 달리 말할 수도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이상현의 견해를 따르기로 한다.
 - 5)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두의사상) (서울: 성화출판사, 1993), p.758.
 - 6) 앞의 책, p.758.
 - 7) 앞의 책, pp.762–763.

8) 앞의 책, p.764.

9) 앞의 책, p.765.

10) 앞의 책, p.765.

11) 앞의 책, p.772.

12) 앞의 책, p.773.

13) 앞의 책, p.775.

14) 앞의 책, p.776.

15) 앞의 책, p.778.

16) Rawls, John.,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pp.60-61. 참조.

17)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pp. 766-767. 참조

18) 앞의 책, p. 774. 참조

19) “형제주의 그 자체는 상식적인 의미의 동포주의이긴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국경 속에 갇혀 있는 지역적, 국가 내의 국민이 서로 형제의 관계를 맺는 것과 같은 동포주의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된 뒤에 전 인류가 한 중심을 부모로 모시고 그 부모의 자녀로서 서로 형제자매의 관계를 맺는 방식의 동포주의인 것으로서 참된 의미의 사해동포주의입니다.”(앞의 책, p.773)

20) 민주적 책임성의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국민소환제 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보편화되어 실천되지 않고 있다.

21) Manin. Bernard.(eds.), *Democracy, Accountability, and Represent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4-5. 참조

22) 엘스터(Elster)의 시장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핵심 개념이다. Elster, Jon. "The Market and Forum: Three Varieties of Political Theory," in Elster. (eds). *Foundations of Social Choice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참조

23) 현대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하면서는 근대 민주주의 주권자를 명명했던 인민을 ‘시민’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현대 민주주의의 성립은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 24) 임혁백, "세계화 시대의 이익집단정치 모색 : 결사체 민주주의", 『성곡논총』, 제29집. 1998. p.424.
- 25) 신율(theconomy)이란 텔리히의 개념으로 근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autonomy)이나 종교적 타율(heteronomy)을 넘어서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성의 법이기도 하며 인간 자신의 근거인 신적 토대에 뿌리박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신율은 인간 자신의 법이면서도 인간 자체를 초월해 있는 법이기도 하다. 김경재, 폴 텔리히,(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pp. 162-163 참조.
- 26) 공영주의의 책임성은 공영주의의 이념인 통일원리의 책임분담론에 근거함으로써 자율성을 제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율성을 말하기 때문에 근대정신의 산물인 이성적 자율성과는 다른 신율적 책임성이라고 할 수 있다.
- 27)이하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은 2005 년 발족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가 국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11 대 청원'을 참조했다.